「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2021 겨울): 273-295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4 No.4 (2021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4.4.11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 동 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 대응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루어지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인지와 정책 필요성 태도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지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들은 설립 타당성, 경영 효율화 및 경영성과, 경영평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지역주민의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 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분석과 신뢰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정책 필요성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필요성의 태도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 지방공기업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 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및 제도적인 절차 등을 통해 추진하지만,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정책 수요 대응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이용자인 지역주민의 입장 및 태도가 중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활동 영역 및 기능을 설정하고 정책 효과 및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2020)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저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 수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고, 공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책 수요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설립은 재정부담과 더불어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주민의 서비스 제공 한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필요성 공감 및 정책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임도빈 외(2012: 2)은 "정책의 관심 욕구 증대를 위해 정책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을 중시해야 하고, 시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동의와 이해 없이는 정책실행이 어렵다. 그 이유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인 국민과의 상호작용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차희원 외, 2018:92). 특히 정책인지도(정책 리터러시)의 격차는 정책의 불평등으로 작용하여(정광호, 2008: 96), 공공기관의 설립으로 인한 정책 혜택 및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이해 정도에 따라 정책 과정 및 정책집행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달라진다. 정책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정책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형미·이유나, 2018). 따라서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태도(강형미·이유나, 2018:26)와 정책지지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그리고 정책지지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들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한인섭 외, 2013), 경영성과 및 경영 효율성(유금록, 2017; 이혜윤, 2019), 경영평가(김인자·전진석, 2009; 김재관, 2013)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기관 설립의 법적인 측면에서 설립 방향 및 설립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와 설립 유형 등이 결정된 이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립의 객관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경영 평가하게 되어 있어 이 부문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직·간접인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정책수혜자의 정책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정책 이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책 이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이해 수준인 정책인지도는 정책에 대한 태도(policy attitude)와 정책지지(policy support)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형미·이유나(2018: 26)의 연구에서도 정책 이해 수준 정도에 따라 정책 태도와 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최근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간적인 범위로 전라북도를 선정하였다. 최근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그후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이 추진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공공기관 설립에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연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관련 제도와 유형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육성 및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혁신성장 거점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한 바 있고, 경기도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확정하였으며, 광주의 경우도 “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원, 울산, 충남, 인천 등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에너지, 2018.1.15.).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군산시에서 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해 ‘군산시민 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공공기관의 설립을 가시화하고 설립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 관심은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급목표를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설정 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및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 등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40년)」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격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더불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수소산업을 신성장 생태계 정책으로 추진하고,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全주기 등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미래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등을 위한 혁신플랫폼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을 전략적 투자 산업으로 선정하고, 도시 및 산업 등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생태계 전환을 위해 도시 인프라 구조 및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7.8.25). 따

라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산업, 그린뉴딜 사업, 수소경제 기반 구축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및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하며 저효율 소비구조의 개선과 에너지 산업의 육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등을 총괄하고 진흥할 수 공공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유형은 지방공사, 재단법인, 위탁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운영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형태로 “제주에너지공사”(2012.7.4. 설립), “서울에너지공사”(2016.12.21. 설립) 등이 있다. 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와 제49조(설립)」에 의거하여 지역 에너지 지원관리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성 및 수익성이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에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국내 최초 지역에너지 공사로 설립되었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에 설립되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 등의 활용 및 보급, 이용 등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이 검토되었다. 그 중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풍력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의 자립이 중점 추진되었고,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 및 인력·조직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수권 자본금이 1,000억 원이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수권 자본금이 1조원이다. 예산 규모의 경우도 “제주에너지공사”는 42,133백만 원인 반면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예산규모는 186,825백만 원이다.

재단법인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며, “광주시 기후환경센터”,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있다. “광주시 기후환경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 교육 홍보, 국제협력 등이며,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대응, 연구사업, 교육홍보 등이며,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을 수행하고 있다. 위탁은 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전문기관에 운영의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경기에너지센터”와 “충남에너지센터”가 있다. “경기도에너지센터”는 민간위탁방식, “충남에너지센터”는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추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사업 규모 및 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1〉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 유형

유형	위탁		재단법인			지방공기업(공사)	
	민간	공공					
구 분	경기도 에너지센터	충청남도 에너지센터	광주시 기후환경센터	강원도 한국기후변화 연구원	전남 녹색에너지연 구원	제주 에너지공사	서울 에너지공사
자본금	-	-	-	-	-	663억 (도현물100%)	3,584억원 (시 100%)
조직	3팀	3팀	3팀	1처1센터 2부1팀	1단1실1본부 6실1센터	1본부2처 1센터(6부)	1실3본부 2실5처 2지사 1소(25부)
인력	11명	10명	정원 14명 현원 14명	정원 20명 현원 16명	정원 45명 현원 44명	정원 51명 현원 40명	정원 240명 현원 221명
예산	3,836백만원	800백만원	1,446백만원	800백만원	1,091백만원	42,133백만원	186,825 백만원
기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에너지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에너지통계 관리	·에너지사업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신재생 에너지 펀드구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획 ·미세먼지 대응 교육홍보	·기후변화 중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등	·에너지 신사업 육성 인프라구축 ·에너지보급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밸리	·에너지연구 기술센터운영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에너지 교육홍보,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진단사업 ·환경·에너지 시설건설 및 운영 ·배출권관련사업

자료: 이동기(2020).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방안. p.203. 재인용

2. 정책 인지 및 태도, 정책지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인지도

정책인지도는 정책 이해도 또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을 협의와 광의 또는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 리터러시의 선구적인 연구를 한 정광호(2008: 76)는 협의와 광의 개념으로 정책 리터러시를 보고 있는데 협의의 개념으로서 "정책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책 과정과 내용이 자신의 이해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 리터러시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안 외(2019 : 26) 연구자들은 정책 리터러시의 경우 "단순히 정책 인지 차원을 넘어 정책의 이해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 비판 능력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행위적 역량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 리터러시는 단순한 인지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및 정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모든 단위와 더불어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참여적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다. 결국 정책 인지도(리터러시)는 사회변화의 흐름과 정책변화 등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대상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 활용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 수용성, 정책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혜영·김주경, 2020; 이영안 외, 2019)

또한 정책 리터리시의 유형을 전통적 리터러시(traditional literacy),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로 구분하였다(정광호, 2008: 77). 정광호(2008)는 전통적 리터러시는 "단순히 정책 지식 및 정보의 이해수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실생활에서 정책 및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책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창의적,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리터러시의 유형을 활용하여 현재까지도 사회현상 및 정책현상 등을 설명,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예컨대, 고혜영·김주경, 2020; 이영안 외, 2019).

정책 인지도와 관련된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인지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 되고(임도빈 외, 2012; 최연태·박상인, 2011; 정광호, 2008), 정책 인지도의 주체 및 대상의 경우 지역주민 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인지도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 과정 참여 촉진(이영안 외, 2019; 박서연·전희정, 2019),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정당성 획득, 정책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서연·전희정(2019) 연구에서도 주민참여에 있어 정책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가 촉진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정책의 활용, 정책 의사결정과정의 의견 소통, 민주주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윤영석·윤지웅, 2018 : 143). 또한 정책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적응, 순응, 대응 등을 통해 정부 신뢰가 형성되고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강형미·이유나, 2018 재인용). 정책의 인지도가 정부 신뢰로 연결되는 것이다(김수진·차희원, 2017: 131). 이러한 정책 인지도는 공공기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에 대한 복잡한 다양한 정책 정보 등을 획득하고 이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설립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들은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 정책 과정의 의견 표명 및 정책사업의 참여가 용이해 진다(박서연·전희정, 2019: 202). 정책의 이해 및 인지가 결국 태도,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임도빈, 2012: 5), 그 대상에 대한 선호 결정(preference decision)의 기능을 하게 된다(Eriksen & Fallan, 1996: 387).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 수요 및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기대 수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설립 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만큼 세금부담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책인지도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 정책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는 그 정도에 따라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임도빈 외, 2012).

정책 인지도가 부족하게 되면 공공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설립은 유형에 따라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지방출자 및 출연기관, 위탁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설립은 정책변화 및 정책 수요,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설립에 대한 정책 인지도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설립 기관의 목적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정책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설립된 이후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책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의 비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순응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책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이영안 외, 2019: 27).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책 인지도가 부족하면 정책과정 및 정책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정동호, 2008; 임도빈 외, 2012; 최연태·박상인, 2011). 정책 인지도가 결핍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정책 갈등 발생 및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정동호, 2008: 79-80), 정책불신이 초래되며(최연태·박상인, 2011: 74), 정책 참여와 정책 혜택 상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임도빈 외, 2012: 5).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도 불구하고 정책인지가 부족하여 정책흡수가 약하여(김수진·차희원, 2017: 130), 정책효과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인지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설립을 추진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정책이해 및 정책 참여를 높이는 요인이며,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정책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적 여건을 성숙하게 하고 설립 이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대를 지역주민들에게 가질 수 있게 한다.

2) 정책 필요성 태도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책 필요성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 필요성의 태도는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책 필요성 태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자신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 가를 느끼는 정책 필요성의 태도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입안 및 정책과제로서 추진이 가능하다(김수진·차희원, 2017). 공공기관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정책 필요성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주민 및 중앙정부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은 불확실한 행정환경 및 정책 수요의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어 행정에 처해있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의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이러한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손호중·채원호(2005)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정책 필요성

인지의 경우 그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기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신뢰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반면에 정책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김수진·차희원, 2017: 13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 공공서비스의 변화 등 정책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환경의 복잡 및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의 제공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책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 및 정책 내용 등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정책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으로부터 응집해오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자원(substitute resources)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정책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정책 필요성 태도를 높이고,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참여하게 하여 정책 지지를 높이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정책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 집단에게 정책 필요성 태도를 향상시켜 지역의 합리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정책의 정당성 수용과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지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예산 낭비 비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정책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자는 정책 방향의 인지 및 수용 정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가 발생한다. 공공기관 설립은 해당 기관의 설립 정책이 본인이나 지역사회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할 경우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나,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상호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지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주소현, 2018: 124). Menenguello(2005)은 지역주민의 태도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책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특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김재호, 2014)와 특정 정책에 대한 정책 필요성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주소현, 2018; 김수진·차희원, 2017) 등이 있다. 정책적인 제도 등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 위치이론이 활용되고 있다(주소현, 2018; Yang & Barrett, 2006). 사회적 위치이론의 개념에 대해 주소현(2018: 216)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제도 또는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제도 또는 정책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각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 이론에 의해 적용된 변수들은 주로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주소현, 2018: 131). 개인이 둘러싸여 있고 오랫동안 축적, 학습 되어 있는 경험 등에 따라 연령대별, 여성

과 남성, 그리고 직업 정도, 교육수준 등에 의해 개인의 이해가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3) 정책지지(policy support)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공공서비스 수요 공급 등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 추진은 결국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지지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지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jzen(1991: 180)에 의하면 "정책지지는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 평가를 통해 표출되는 호의적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대해 금현섭·백승증(2010)의 연구자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정책지지가 정책선호(preference), 정책 태도(attitude),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와 혼용되고 있지만, Ajzen(1991) 개념 정의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경수 외(2013) 연구자도 "정책지지는 특정한 정부 정책에 대해 공중이 느끼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라 정의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정책지지를 개인의 선호에 의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 보다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호의와 비호의 등의 이분론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차희원 외(2018) 연구자들은 Pickel & Pickel(2006)가 정책지지를 개념 정의한 "특정 정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공중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지지의 개념 정의는 특정한 정책 대상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선호 및 가치관, 지식, 정보, 생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지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 금현섭·백승주(2010)는 물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 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책지지는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금현섭·백승주, 2010: 212), 정책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이연택 외, 2019: 120), 개인의 선호 및 긍정적 태도가 반영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정책지지의 태도가 집단화하고 이를 표명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정책 신뢰나 정책 추진의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적정하게 대응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다양한 정책변화를 예상하고 추진된다. 공공기관 설립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은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일상 생활과 주민 복리와 연관된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여영현 외, 2020).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은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책 신호가 지역주민들에 전달되어야 정책지지가 발생한다.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하여 투자되는 재정 부담은 대

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책지지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 정도 및 지역주민의 의견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한인섭 외, 2013). 이와 같이 공공기관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정책지지 정도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지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설립 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관계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

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인지도·정책 이해도와 관련된 연구이다(예컨대, 임도빈 외, 2012; 고혜영·김주경, 2020; 최연태·박상인, 2011; 윤영석·윤지웅, 2018; 이영안 외, 2019; 박서연·전희정, 2019 등). 임도빈 외(2012) 연구자들은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정책성과 인지도, 독립변수로 정책이해도, 통제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치관 변수, 참여경험 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인지에 양(+)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연령, 성별, 학력, 소득의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의 변수에서도 국정수행 만족, 평등의식, 정부책임, 정부신뢰의 변수 등에서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인지도(정책 리터러시)의 신뢰와 수용성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고혜영·김주경, 2020). 고혜영·김주경(2020)의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 등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의 경우 신뢰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판적 리터러시의 경우 신뢰요인 및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주민의 정책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최연태·박상인, 2011; 윤영석·윤지웅, 2018; 이영안 외, 2019; 박서연·전희정, 2019). 이들 연구자들은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정책인지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영안 외(2019) 연구자들은 아동친화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 기능적 정책 리터러시,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 등의 결정요인으로 인구사회적 요인(성, 연령, 학력, 소득, 자녀수)과 더불어 정책 효능감(policy efficacy), 정책 PR(policy public relationship)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효능감을 정책 리터러시와 연계하여 내적 정책 효능감과 외적 정책 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내적 효능감을 정책의 구성요소 및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보았고, “외적 효능감을 정책 결정자나 정책 체제, 시민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정책 리터러시 결정요인은 연령, 자녀수, 정책PR과 정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능적 정책 리터러시의 결정요인은 성별(남성), 정책PR, 정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는 연령, 학력, 자녀수, 정책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윤지웅(2018) 연구자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리터러시를 인구 사회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정책문제 인식요인(기후변화 이해, 기후변화 심각성, 대응 필요)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 미쳤고, 주관적 이해 수준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태·박상인(2011) 연구자들은 중앙부처 웹사이트 이용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앙부처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지방정부의 웹사이트 이용도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활동 수준과 정책 리터러시간의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학력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서연·전희정(2019)의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가 사회자본과 찾동 사업의 주민참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다(김수진·차희원, 2017; 주소현, 2018). 김수진·차희원(2017) 연구는 안전의식과 미디어 이용이 정책인지, 정책 필요성 및 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정책 인지도와 정책 필요성 그리고 기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책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 정책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신뢰도 정책인지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주소현(2018)의 연구는 국민연금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정책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전반적으로 정적관계), 소득(높을수록), 결혼상태(기혼), 공감성향(높을수록), 이타주의 성향(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높을수록)가 국민연금 정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지지에 대한 연구들이다(오경수 외, 2013; 강형미·이유나, 2018; 차희원 외, 2018; 이연택 외, 2019; 금현섭·백승주, 2010). 정책지지의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지지 정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PR활동(오경수 외, 2013; 강형미·이유나, 2018; 차희원 외, 2018; 이연택 외, 2019), 정부신뢰와 정치적 이념 성향(금현섭·백승주, 2010) 등의 영향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지지의 연구 대상으로 국가안보(강형미·이유나, 2018), 지역축제(이연택 외, 2019),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오경수 외,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 선행연구의 특징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혜영·김주경(2020)	신뢰, 수용성	정책리터러시	원자력 에너지	표본 500명 구조방정식모형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	인구사회학적요인 정책효능감 정책PR	정책리터러시	아동친화정책	표본 508명 위계적 회귀분석
최연태·박상인(2011)	전자정부서비스이용도, 정치사회적성향, 시민참여행태, 미디어이용행태,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책리터러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표본 1,213명 다중회귀분석
윤영석·윤지웅(2018)	인구사회적 변수 정책문제인식	정책리터러시	기후변화정책	표본 1,172명
강형미·이유나(2018)	정책리터러시, 불만, 불신, 지배통제	정책지지	국가안보정책	300명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차희원·여선하·박단아(2018)	정책PR	정책지지		387명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임도빈·정현정·강은영(2012)	정책이해도	정책성과인지도		1,149명 회귀분석
이연택·김태형·오은비(2019)	정책PR, 정책리터러시, 정책관여	정책지지	지역축제정책	202명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주소현(2018)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결혼상태, 자가보유 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 의견	국민연금 정책	1,000명 위계적 회귀분석
박서연·전희정(2019)	사회자본(독립변수) 정책인지도(매개변수)	주민참여의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정책지지와 관련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현미·이유나(2018) 연구자들은 국가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PR활동이 부분적으로 부정적 조직-공중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만의 경우 정책지지에 부(-)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연택 외(2019) 연구자들은 지역축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PR이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PR, 정책 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관여가 정책PR, 정책지지, 정책 리터러시와 부분적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수 외(2013) 연구자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정책PR이 정책지지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분석결과 정책PR활동에 따라 정책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기도 하였다. 차희원 외(2018) 연구자들은 정책소통에서 정책 PR이 정책지지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정책PR이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공공기관 설립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 정책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정책인지, 정책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재생에너지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업 및 정책 영향권에 포함되는 부안, 군산, 김제, 고창 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이루진 것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이루어졌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2018.10.30.)하였고, 전라북도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혁신거점 역할 수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22년까지 태양광 2.4GW, 해상풍력 0.6GW(새만금 외측 : 0.5GW, 내측 : 0.1GW)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1]. 또한 전라북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에 에너지산업융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특화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사업을 육성하고, 2단계는 그린수소 등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여 연관 산업 및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여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의미한다[2].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능의 거점화를 위해 에너지 전담 기관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 중

1) 새만금개발청. (2018.10.30.).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개최 보도자료 재인용
2) 산업통상자원부. (2019.1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보도자료

에 있는 상태에 있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0월 29일 ~ 11월 5일까지 인구 유동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문조사원을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고려하여 생활지역과 인접한 곳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기업과 실증단지, 에너지생산단지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부안, 군산, 김제, 고창 등의 지역주민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47	51.9	연령	20-30대	104	36.7
	여성	136	48.1		40-50대	147	51.9
	계	283	100.0		60대 이상	32	11.3
지역	군산	70	24.7		계	283	100.0
	김제	71	25.1	직업	자영업/농어업	57	20.1
	고창	72	25.4		공무원/전문직	58	20.5
	부안	70	24.7		사무직/서비스직	84	29.7
	계	283	100.0		전업주부/기타	84	29.7
거주기간	10년 미만	63	22.3		계	283	100.0
	10-30년 미만	113	39.9				
	30년 이상	107	37.8				
	계	2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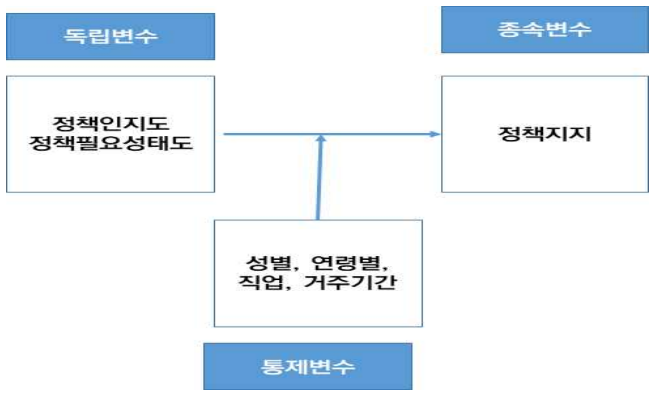
종속변수는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지지로, 총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중에 '귀하는 전라북도에 재생에너지 등 사업 및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과 '귀하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설립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문항으로 대별하여 구성하였다. 공공기관 설립 필요에 대한 문항은 '① 매우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하였고, 공공기관 설립 지지에 대한 문항은 '① 매우 지지한다 ~ ⑤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등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인지에 대한 문항과 정책 필요성 태도에 대한 문항은 각각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① 매우 그렇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와 '① 매우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등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총 283명 중 남성은 147명(51.9%), 여성 136명(48.1%) 이었고, 연령대는 40대~50대가 147명(51.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군산시 70명(24.7%), 김제시 71명(25.1%), 고창군 72명(25.4%), 부안군 70명(24.7%)으로 나타났고, 지역 거주기간은 10년~30년 미만이 113명(39.9%)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이 차지하고 있다.

2.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인지도와 정책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인지도, 정책필요성 태도, 정책지지와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둘째, 변수들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별, 직업, 거주기간 등과 독립변수인 정책인지도, 정책필요성 태도 등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별, 직업, 거주기간)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 정책인지도는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정책 필요성 태도는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1은 개인의 특성인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영안 외(2019), 정광호(2008), 임도빈 외(2012), 윤영석·윤지웅(2018), 금현섭·백승주(2010) 연구, 최연태·박상인(2011) 등을 참고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는 정책인지도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선행연구들로 김수진·차희원(2017), 임도빈 외(2012), 윤영석·윤지웅(2018), 고혜영·김주경(2020), 이영안 외(2019), 강형미·이유나(2018), 이연택 외(2019), 박서연·전희정(2019), 오경수 외(2013) 등을 참고로 하여 가정하였다. 연

구가설은 3은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주소현(2018), 김수진·차희원(2017), 오경수 외(2013), 강형미·이유나(2018), 이연택 외(2019), 고혜영·김주경(2020), 차희원 외(2018), 금현섭·백승주(2010)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타당성 검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에너지 공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인지도와 정책 필요성 태도를 파악하였다. 이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내재적 요인을 추출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KMO〉0.05, Bartlett의 p〈0.05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이 0.640~0.939으로 나타나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이 연구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측정 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도 α=0.957, 정책 필요성 태도 α=0.928, 정책지지 α=0.900 등으로 대부분 0.9 이상으로 일반적인 신뢰성 기준인 0.6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계수

변수명	평균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α)
정책 인지도	2.90	에너지행정을 위한 행정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878	4.989	29.350	.957
		에너지행정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901			
		에너지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917			
		에너지 지원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939			
		에너지에 대한 도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906			
		에너지에 대한 교육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910			
정책 필요성 태도	1.53	지역주민을 위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812	4.468	26.280	.928

		공공기관 설립 시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한다	.860			
		공공기관 설립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한다	.853			
		공공기관 설립 시 에너지 정책 비전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한다	.849			
		공공기관 설립 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한다	.861			

총설명력=76.638%, KMO=.888, Bartlett = 4376.068, p= .000

각 변수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정책 필요성 태도에 해당하는 응답 평균은 1.53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필요성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지지의 경우도 평균 1.6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지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책 인지도의 경우는 다른 변수보다 다소 낮으나 평균 2.90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다양한 지역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 지지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 인지도와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가 먼저 투입되었다. 응답자들의 특징에 따라 성별과 연령, 거주기간, 직업으로 나누었다. 연령은 20에서 30대, 40대에서 50대, 60대 이상으로 구성하였고,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은 자영업·농어업, 공무원·전문직, 사무·서비스직·기타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 2에서는 정책 인지도, 모형 3에서는 정책 필요성 태도를 투입하여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성별, 거주기간,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연령의 경우 (β= -0.057, 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정책인지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중 모형1과 마찬가지로 연령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필요성 태도가 추가된 모형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모형1, 모형2과 마찬가지로 모형3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표 5〉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모형1

변수		모형 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β			
성별(더미)		0.191	0.422	0.029	0.454	0.650	1.147
연령		−0.057	0.018	−0.211	−3.243	0.001	1.221
거주기간		0.000	0.012	0.001	0.011	0.718	1.147
직업 (더미)	자영업/농어업	0.146	0.642	0.018	0.228	0.820	1.712
	공무원/전문직	−0.704	0.621	−0.085	−1.134	0.258	1.622
	사무/서비스직/기타	−0.409	0.553	−0.059	−0.739	0.460	1.836
R2		0.042					
Adj R2		0.022					
F(Sig.)		0.061					

*p 〈 .05, **p 〈 .01

〈표 6〉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모형2

변수		모형 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β			
성별(더미)		0.196	0.422	0.029	0.464	0.643	1.147
연령		−0.057	0.018	−0.210	−3.229	0.001	1.222
거주기간		−6.275E−5	0.012	0.000	−0.005	0.996	1.148
직업 (더미)	자영업/농어업	0.152	0.642	0.018	0.237	0.813	1.712
	공무원/전문직	−0.691	0.622	−0.084	−1.112	0.267	1.624
	사무/서비스직/기타	−0.377	0.556	−0.054	−0.678	0.499	1.853
정책 인지도		0.020	0.033	0.036	0.606	0.545	1.014
R2		0.044					
Adj R2		0.019					
F(Sig.)		0.545					

*p 〈 .05, **p 〈 .01

〈표 7〉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모형3

변수		모형 3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VIF
		B	표준오차	β			
성별(더미)		0.035	0.379	0.005	0.093	0.926	1.150
연령		−0.037	0.016	−0.138	−2.337	0.020	1.249
거주기간		−0.005	0.011	−0.026	−0.452	0.652	1.151
직업 (더미)	자영업/농어업	0.123	0.576	0.015	0.214	0.831	1.712
	공무원/전문직	−0.377	0.588	−0.046	−0.675	0.500	1.632
	사무/서비스직/기타	−0.142	0.499	−0.021	−0.285	0.776	1.859
정책 인지도		0.025	0.030	0.045	0.842	0.401	1.014

*p 〈 .05, **p 〈 .01

통제변수(성별, 연령, 거주기간, 직업)와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의 각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정책지지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연령의 경우 모형1에서부터 모형3까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영안 외, 2019; 주소현, 2018). 연령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지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광호(2008)는 정책 이해도가 연령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해 정도는 개인별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만큼 연령이 실질적으로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연령을 제외한 성별, 거주기간, 직업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윤영석·윤지웅(2018) 연구와 임도빈 외(2012) 연구 등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책인지도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분석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정책인지도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예컨대, 김수진·차희원, 2017; 임도빈 외, 2012; 윤영석·윤지웅, 2018; 고혜영·김주경, 2020 등). 이러한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행 연구들은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주소현(2018)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정책 및 예산, 참여 등을 포괄하는 정책 인지도 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의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인지도는 정책적인 PR이나 정책홍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차희원 외, 2018, 강형미·이유나, 2018; 오경수 외,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인지가 다른 변수의 평균보다도 낮은 2.90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보통적인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 필요성 태도가 정책인지보다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지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인지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그리 많지 않아 인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정책이나 사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인 만큼 에너지 정책이나 사업 등이 확대되어 적극적 추진 인식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결국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 정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긍정적인 정책 생산물이 산출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책 필요성 태도를 긍정화시키는 정책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그리고 정책지지 등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던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지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범위의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논의를 확장할 수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이라는 정책 이슈를 설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태도, 정책지지를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지지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에 따른 정책 필요성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정책지지를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 유형별로 정책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홍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책 이해 및 정책지지, 정책 필요성 태도 등이 실질적인 설립 방향 설정 및 공공서비스 이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은 정책환경 및 재정여건, 사업의 기능 및 역할 등의 객관적 요인 등과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설립의 주요 정책 대상인 지역주민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정책과 관련된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화 수준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연태·박상인(2011: 93)의 연구자도 정책인식도인 정책리터러시의 측정을 통한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한 것 만큼 해당 분야의 정책지식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후일의 몫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설립에 대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립이라는 단일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 정책 전체로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대상 범위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 또한 후일의 연구 몫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다루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정책인지도, 정책필요성 태도, 정책지지와의 관계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공공기관 설립은 결국 지역주민의 정책 수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책 필요성 공감 및 이로 인한 정책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대상 확장 및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참고문헌

강형미·이유나. (2018). 국가안보 PR 활동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정책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PR학회」. 22(6): 24-52.

고혜영·김주경. (2020).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 20(1): 97-117.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행정논총」. 48(4): 201-228.

김수진·차희원. (2017). 미디어이용과 안전의식이 정책인지, 정책필요성 및 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안전처의 정책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광고학연구」. 28(4): 123-159.

김인자·전진석. (2009).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지방정부연구」. 13(1): 133-148.

김재관. (201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메타평가-전라북도 지방공기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27(3): 49-70.

김재호. (2014).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보건복지포럼」. 209: 62-73.

노성민·류숙원. (202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23-45.

박서연·전희정. (2019).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8(1): 195-221.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39(3): 87-113.

여영현·차재권·김혜정. (2020). 공기업 정책과 시장: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6(1): 1-24.

오경수·천명재·김희경. (2013).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190-202.

유금록. (2017). 메타변경 초율성 모형을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기술격차 평가.「한국사

회와 행정연구」. 28(1): 167-191.
윤영석·윤지웅. (2018).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 영향요인 분석.「사회과학연구」. 44(3): 139-160.
이동기. (2020).「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이연택·김태형·오은비. (2019).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광학연구」. 43(6): 117-134.
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국정관리연구」. 14(1): 23-52.
이혜윤. (2019). 공공부문 산출물 특성을 본 공공기관 서비스 유형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지표를 활용하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2): 105-135.
임도빈·정현정·강은영. (2012).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1-29.
정광호. (2008). 정책 리터러시 함수 분석 :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행정논총」. 46(4): 73-104.
주소현. (2018).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관한 의견과 관련 요인 탐색.「소비자학연구」. 29(2): 123-150.
차희원·여선하·박단아. (2018). 정책지지에 대한 정책PR 효과검증: 대화형 정책소통 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광고학연구」. 29(3): 91-119.
최연태·박상인. (201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73-98.
한인섭·이정애·박근영. (2013).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거번넌스학회」. 20(1): 111-132.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179-211.
Eriksen, Knut. & Fallan, Lars. (1996). "Tax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 A report on a quasi-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3) : 387-402.
Meneguello, Rachel. (2005). "Government Popularity and Public Attitude to Social Security Reform in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2): 173-189.
Yang, Phillip and Nadine Barrett (2006),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ward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95-109.

이동기(李同基):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조직 및 정책관리, 행정정보, 공간정보정책 등이다.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2019),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연구경향 분석(2020) 등이 있다(base@jthink.kr).

〈논문접수일: 2021. 1. 7 / 심사개시일: 2021. 1. 8 / 심사완료일: 2021. 1. 21〉

Abstract

The Effect of Policy Recognition and Policy Necessity Attitudes on Policy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Energy Public Institutions

Lee, Dong G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awareness and policy need attitude on policy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energy-related public institutions.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made for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policy environment and provide public services, but it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recognize policies and attitude toward the need for policies to establish public institutions, which leads to policy support.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discussed focusing on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manage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and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local residents, etc.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problems, a survey of local residents and others was conducted to analyze confirmative factors, analyz Cronbach's Alpha, and analyze hierarchical regress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energy public institutions was most affected by the attitude of policy necess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policy activities may be necessary to form an attitude of policy necessity in order to secure policy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Key Words: Policy awareness, Policy necessity attitude, Policy support, Establishment of energy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enterprise